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복지제도의 Public-Private-Social Mix  
발제자: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 시: 2017년 03월 30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제 24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03월 30일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연사로 '복지제도의 Public-Private-Social Mix'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발 맞추어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그동안 성장(Growth) 혹은 분배(Distribution)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장(Growth)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번영(Prosperity) 혹은 분배(Distribution)로 접근하는 추세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진보는 평등을 추구한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부가 복지 공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기업 전부를 정부가 부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적용되는 진보 입장의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인다. 보수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성장(Growth) 또는 번영(Prosperity)을 이루고자 한다. 공공(Public)부문, 민간(Private)부문과 사회단체(Social) 전부가 복지 공급자가 되어야 하며 개인 능력과 나눔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 한다. 진보는 국가 우선주의 입장이므로 국가가 잘 살아야 개인과 기업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는 복지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예산의 39.5%가 사회복지와 복지 부문에 투자된다. 2017년도 예산 규모가 146.4조 원에 이르며 국민 146만 명에게 연간 1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다. 국민 복지비용이 증가

했음에도 국민들의 복지 기대치 대비 만족도가 매우 낮다. 노인요양, 보육, 교육, 주택 등 양적·질적 복지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비용과 세금에 대한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여성을 위한 사회 보장 인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은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 ‘여성은 가사만 담당해야 한다.’란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도 다양해졌다. 근로자가 자본 시장에 참여하면서 특허권, 저작권,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자원을 형성하고 축적하게 되었다.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을 살펴봐야 한다. 다음 복지정책의 잘못된 전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출산을 하라로 인구가 정체되었음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제도 고쳐야 한다. 또한 노인 의료비가 급증했음에도 평균수명이 정해되었다고 여전히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잔해를 제거해야 한다.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 간 이전에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도 박애정신을 불어 넣어야 한다. 공공복지가 최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지제도가 즉각적으로 북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가능성을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30~40% 감소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최후의 노후보장수단이기엔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이 10%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3.2%이었으며 민영보험 가입자는 2015년 기준 3,150만 명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실업률이 감소되어야 하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보험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사중적 손실이 늘어났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사회보험 혁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 개혁의 원칙으로 각 공공(Public)부문, 민간(Private)부문, 사회단체(Social)의 개인적 선택이 허용되어야 한다. ‘만족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고 낭비다’라고 여기며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 실태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 운영상의 경제학적 원칙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국민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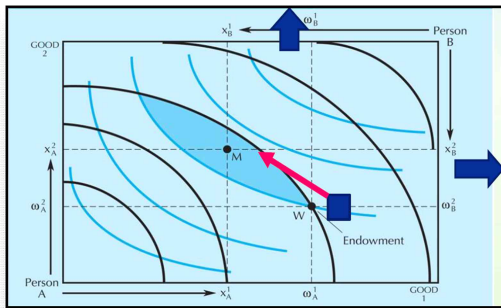
## ■ 한국형 보수와 진보가 말하는 복지제도

### : 복지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입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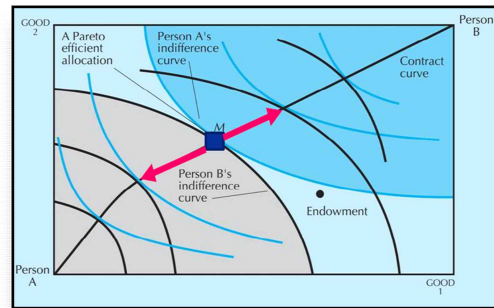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그동안 성장(Growth) 혹은 분배(Distribution)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장(Growth)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번영(Prosperity) 혹은 분배(Distribution)로 접근하는 추세다. 번영(Prosperity)의 의미가 보수 진영이 지향하는 바에 더 부합한다.
-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진보는 평등을 추구한다.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정부가 복지 공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기업 전부 정부가 부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적용되는 진보 입장의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인다. 보수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성장(Growth) 또는 번영(Prosperity)을 이루고자 한다. 공공(Public)부문, 민간(Private)부문과 사회단체(Social) 전부가 복지 공급자가 되어야 하며 개인 능력과 나눔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진보가 국가 우선주의 입장이므로 국가가 잘 살아야 개인과 기업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는 복지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발휘하자고 주장한다.

- [그림 1]은 보수의 입장을 나타낸다. 현재 국민의 복지 상황이 (W)지점에 있다면 더 나은 위치인 (M)지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복지 상황 개선과 동시에 자원을 투자해야 생산도 증가할 수 있다(Positive-Sum Game).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다원적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는 진보의 입장이 드러난다. 현재 (W)지점에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로지 계약선(Contact Curve)상에서만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보장기능이 사라져버렸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형태로 전환되면서 기업 복지가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는 개인, 기업과 정부의 기능이 함께 발휘되었을 때 정립될 수 있다.



[그림 1]보수의 입장(Positive-Sum)



[그림 2] 진보의 입장 (Zero-Sum)

## ■ 한국의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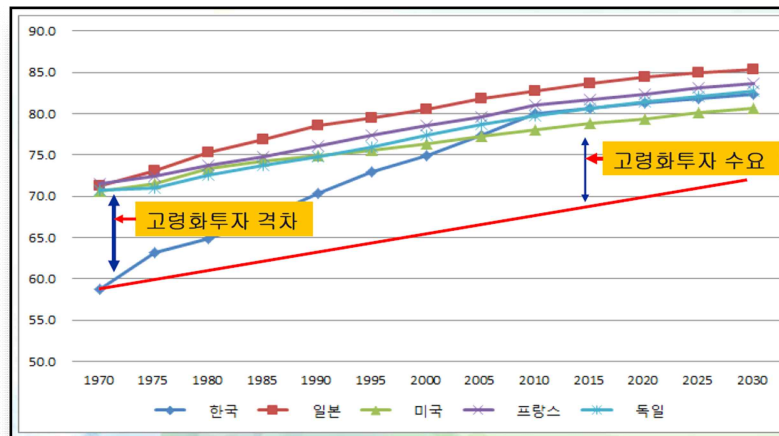
### : 복지제도 혁명을 위해 시대적 상황 진단 필요

- 일반적으로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뉴 노멀(New Normal)’이라 한다. 풍부한 자본, 정보와 기회를 가진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높다. 반대로 저소득층에서는 빈곤의 고착화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인다. 작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低)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이를 대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 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구조적 정부재정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장정책이 한계(Quantitative Easing, QE)에 이르렀다. 한국형 ‘뉴 노멀’로 지칭되는 양극화, 저성장, 고령사회, 구조적 정부재정 적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 동시에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로봇, 인공지능 등 최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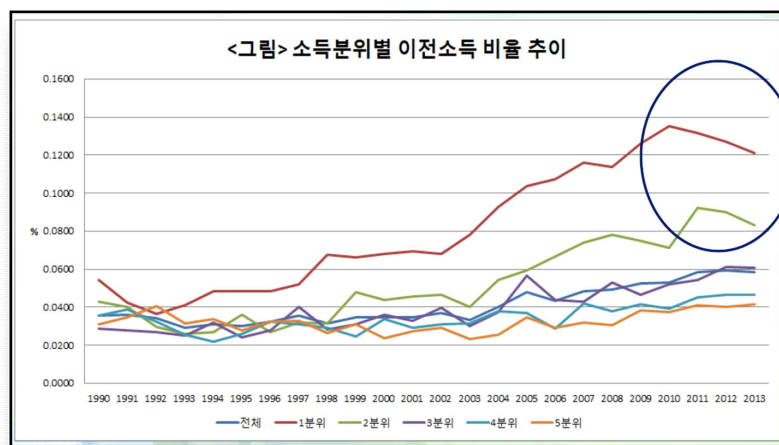
순위	국가	노동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적응력	인프라	법적 안정성	종합
1	스위스	1	4	1	4.5	6.75	3.4
2	싱가포르	2	1	9	3.5	9	4.9
3	네덜란드	17	3	8	6.5	12.5	9.4
4	미국	4	6	4	12	23	10.2
5	일본	21	21	5	12	18	15.4
25	한국	83	23	19	2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1.4
31	러시아	50	38	68	47.5	114	63.5
41	인도	102	90	42	100.5	81.5	83.4
43	브라질	122	93	84	64	97.75	92.2

출처: UBS, 각 분야별 가중평균 순위 기준, 김정욱 외,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신문사, p.53.

[표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순위



[그림 3] 국가별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그림 4] 복지지출의 성과: 전체 소득에 대한 이전 소득비율이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단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기 시작하였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허나 새로운 노동환경이 도래되면서 전통적 노동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인력이 움직인다면 비정규직이 주류를 이룰 것이고, 대부분의 인력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이겨낼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래 [표 1]을 살펴보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적응력, 인프라 구축, 법적 안정성 전부 저조하다.

- 한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다. 가계 저축률이 2011년 3.4%에서 2015년 8.66%로 회복하였으나 이는 고령화와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 감소와 불황형 저축 증가의 결과일 뿐이다. 가계 저축률이 20.13%인 스위스, 16.45%인 스웨덴, 17.48%인 룩셈부르크와 10.38%인 독일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낮은 가계 저축률이 더욱 우려된다. 국가가 파산할 경우 연금 기금이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 정부예산의 39.5%가 사회복지와 복지 부문에 투자된다. 2017년도 예산 규모가 146.4조 원에 이르며 국민 146만 명에게 연간 1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다. 국민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복지 기대치 대비 만족도가 매우 낮다. 노인요양, 보육, 교육, 주택 등 양·질적 복지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비용과 세금에 대한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 : 한국 복지·성장정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

- 우리나라 복지·성장 정책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은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 ‘여성은 가사만 담당해야 한다.’란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도 다양해졌다. 근로자가 자본 시장에 참여하면서 특허권, 저작권,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면 사회적 자본이 되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능력에 따른 기회보장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며 사회·경제활동에 활력을 더한다.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 간 이전에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도 박애정신을 불어 넣어야 한다. 공공복지가 최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복지정책에서 잘못된 전제도 바르게 고쳐야 한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정체되었음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제가 그러하다. 노인 의료비가 급증했음에도 평균수명이 정체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제도의 잔해를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복지제도가 즉각적으로 북한에도 적용이 되어야하므로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한국 복지정책은 발전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빈곤 해결을 위한 빈곤 박멸(Poverty Eradication) 정책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



ty)강화로 빈곤의 함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까지의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반한 수혜 극대화 복지로 소득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허나 오늘날에 이르러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복잡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기회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분배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적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기회 형평성과 정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복지서비스가 공공복지에 종속되면서 복지 서비스 공급체계가 오히려 부실해졌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관료적 행태에서 유발된 공공부문 종사자의 책임성 부재, 전문성 부족, 이해 당사자의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로 복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 민간 병원과 요양 기관과 같은 민간 복지 서비스가 공공복지에 종속되어선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서로 협조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최후의 노후보장수단인 점을 반영하지 못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이 10%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3.2%이었으며 민영보험 가입자는 2015년 기준 3150만 명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실업률이 감소되어야 하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보험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사중적 손실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재연금 지급 불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직업 연관성이 높은 질병이 늘어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재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건전한'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야말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016년 총 지출 4조 7천억 원 중 보험료 수입이 3조 원이었으며 정부 부담금이 1조 7천억 원이었다. 앞으로 청년들이 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한국 복지제도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 번째, 보험료로 조달되는 소득재분배형 사회보험의 모습을 띤다. 보험료 부담 한계가 가중되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연금, 무상급식, 의료보장, 무상보육, 의무교육, 주거지원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무상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복지비용 조달구조가 보험료에서 조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본인부담 기피를 위한 보험 가입자, 보험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가계소득은 하락하면서 소득 양극화, 건강 양극화, 교육 양극화,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 주거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내구 수명을 늘리면서 보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복지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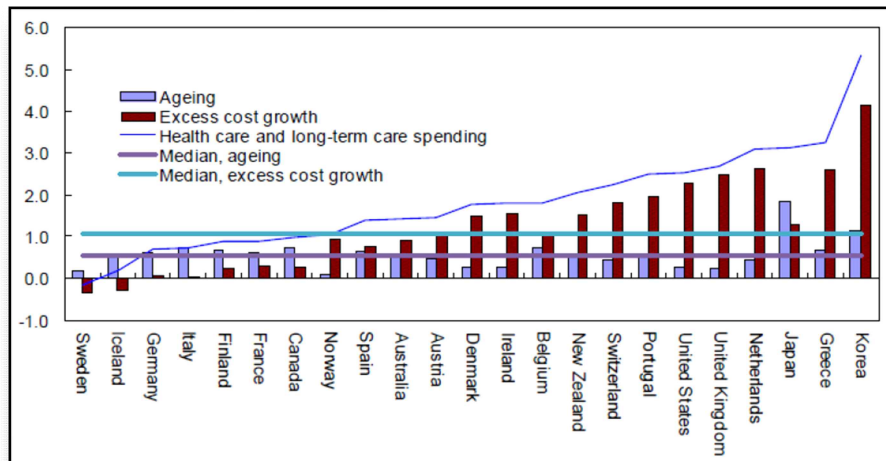
： 복지제도의 **Public-Private-Social Mix**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스웨덴	0.27	0.28	0.05	0.09	0.45	0.44	..	0.34
노르웨이	0.24	0.26	0.06	0.08	0.43	0.42	..	0.31
덴마크	0.23	0.24	0.05	0.06	0.42	0.43	0.23	0.25
스페인	..	0.35	..	0.15	..	0.51	0.26	0.25
이탈리아	0.28	0.32	0.12	0.13	0.47	0.50	..	0.34
그리스	..	0.32	..	0.14	..	0.52	0.36	0.38
영국	0.31	0.32	0.11	0.10	0.51	0.52	0.24	0.27
미국	0.26	0.28	0.17	0.17	0.48	0.50	0.35	0.34
한국	..	0.17	..	0.15	..	0.34	0.32	0.32

[표 2] 주요국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2000년 vs 2010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복지 정책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우선 산업이 발전하여야 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 제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공급 주도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질적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복지산업이 노동집약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을 의료복지산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간 복지산업을 육성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민간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 국민연금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소득재분배급여와 소득비례급여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최근 문제시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목적별로 분할 운영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기금이 소진될 시 실적별로 폐지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기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본적 불로소득 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이다. 70%의 60세 이상 인구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월 소득 130만 원 이하의 4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조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으로 노후를 저축할 여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금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노인 노동시장 활성화로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다.
- 국민건강보험은 63% 수준의 낮은 의료비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특성과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의료비 변화요인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인층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진료비의 연령별 구성비가 2010년 전후하여 쌍봉을 형성하였다. 요양시설과 병원을 오고가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요양 보험으로 진료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료보험을 별도로 도입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외 기업의료보험을 도입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대체한다면 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질병급여(Sickness Pay)제도를 신설하여 질병 때문에 일을 그만 두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영리를 가장한 비영리기관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사회

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완전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 고소득층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2016년 36개의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기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기구를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산업 기술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2020년까지 540만 건의 영상 진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5] 1990~2000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의료비 변화요인 분석 및 비교(단위: %)

-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실업급여제도와 고용정책 통합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낮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유연한 노동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통합하여 기업별 근로자 진료비를 산재보험료에 반영하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산재소득손실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사회보험 혁명

###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려해야 할 원칙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보험 혁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 개혁의 원칙으로 각 공공(Public)부문, 민간(Private)부문, 사회단체(Social)의 개인적 선택이 허용되어야 한다. ‘만족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고 낭비다’라 여기며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 운영상의 경제학적 원칙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새로운 기술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국민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위험을 억제하고 근로빈곤층의 자립능력 제고 방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를 공공, 민간, 사회·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공급을 높여



야 한다.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노인노동시장을 활성화 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제4차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고령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에 대비한 복지제도와 복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제 249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한국의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보이고 한국의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제도는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한국의 진보가 주장하는 무상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기에 단기적인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다. 한국의 보수는 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각 요소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이다.

**질문2** 기업의 사회보장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답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제도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다면 경직된 고용 유연성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질문3** 사회복지제도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답변** 사회복지 공급 기관들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로 노인 요양 시설, 의료 시설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부족하다. 정부의 관료적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진료과정과 결과, 요양 시설 내의 사고 발생 수, 인력, 면적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